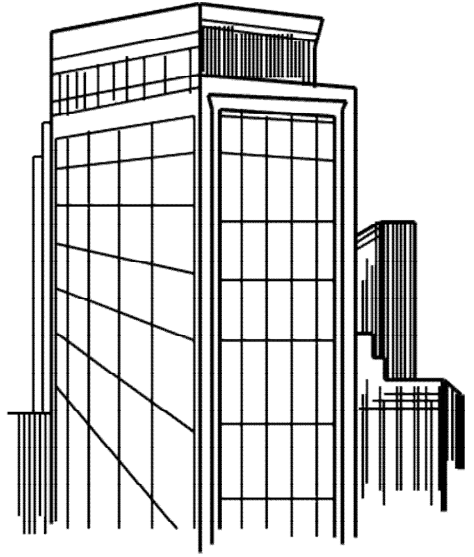


# 경영정보 브리핑

2021. 12. 1. ~ 2021. 12. 31.



## 정책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전기공사업계 판도 바꾸나	P. 1
빨라지는 미국 건축 시계, 한은 금리 인상 채비	P. 2
내년 공공기관 투자 67조 중 47조 SOC 사업 건설에 집중	P. 3
서울 개발정보 한눈에,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P. 5

##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건설공제조합, 20일 영업점 개편 1단계 실시	P. 6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 업무도 이제 '온라인·비대면' 시대	P. 6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4대 이사장 선거전 '돌입'	P. 7
"탄소중립 실현 선도하자", 내년 초 '에너지 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	P. 8

## 금융

월간 경제지표	P. 10
美 12월 FOMC : 시장 예상과 부합한 매파적 색채	P. 11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완화정도의 적절 조정	P. 11
오미크론 확산과 건축통화정책	P. 12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P. 12

## ▣ 중대재해처벌법, 전기공사업계 판도 바꾸나

### 1. 중대재해처벌법, 전기공사업계 생태계 전반 바꾸나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전국 순회 강연을 시행. 지난 2021년 12월 7일에는 서울시 등촌동 중앙회 사옥에서 '정원' 울촌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기공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함.
- 정원 변호사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당장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착각이다.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만 2년 유예되는 것이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정 변호사는 "(처벌법 시행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와 하도급을 맡기는 원청사가 각각 시공사와 하도급사를 고를 때 그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할 것이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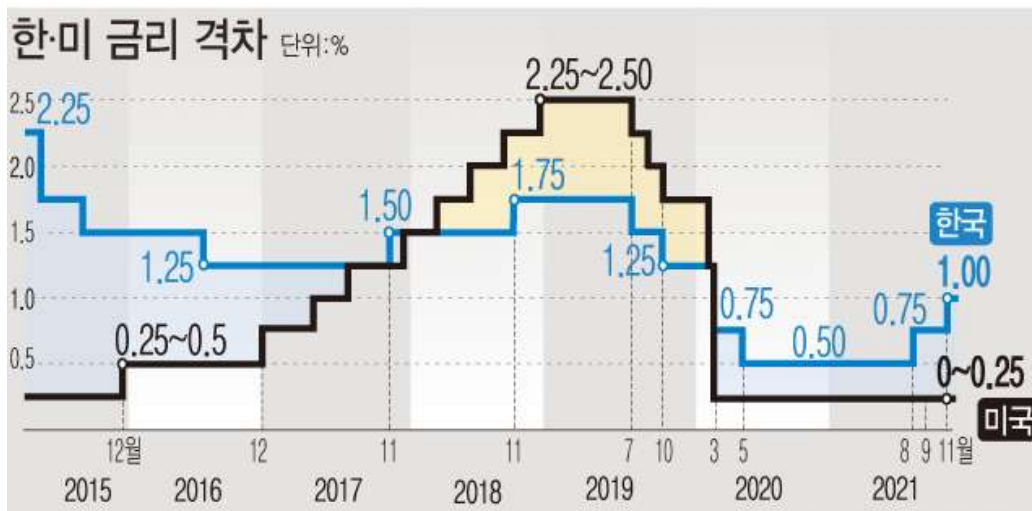
### 2. 중대재해처벌법, 전기공사업계 생태계 전반 바꾸나

- 발주처와 원청사는 당장 처벌법을 피해가는 5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계약하려고 할 것이란 예측. 처벌 대상인 만큼 법안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했을 거라 기대되기 때문임.
-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분석. 마찬가지로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계약 수주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김. 정 변호사는 "법안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위기가 모두 맞물려 있다"고 설명. 법안 시행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
-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도 나옴. 정 변호사는 "불법하도급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며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 또 사고 발생유무를 떠나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 분석함. (전기신문, 2021. 12. 11.(토))

## ▣ 빨라지는 미국 긴축 시계, 한국은행 금리 인상 대비

### 1. 미국,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내는 중

- 미국 물가가 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음. 미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1월 금리 인상 명분이 커지는 중.
-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채권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전망. 연준은 앞서 지난달 3일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테이퍼링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내년 6월에서 3~4월 종료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자료: 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인포그래픽: 뉴시스 안지혜 기자)

- 주요 연준 인사들도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중지하고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인사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은 지난 1일 10월 물가에 대해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라고 표현. 1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더 높아지면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속도를 내고 기준금리 인상도 앞당길 가능성이 커진 것.

## 2. 한국도 내년 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

-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더 커지게 됨. 지난 11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짐.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 한국은 1%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이 1% 포인트로 커진 것.
-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왔고, 시장에도 내년 1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왔기 때문에 대선과 총재 임기 종료 직전인 2월보다는 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그동안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해 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고 우리 통화당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 동향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뉴시스, 12. 14.(화))

## ▣ 내년 공공기관 투자 67조 중 47조 SOC 사업 건설에 집중

### 1. 내년 공공부문 건설 투자는 SOC분야가 견인

- 내년 건설투자를 이끄는 분야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SOC 인프라 건설사업.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금액 67조 원 중 70%에 달하는 47조원을 SOC 분야에 집중할 방침.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교통망 확충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생활SO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SOC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 2. 내년 공공기관 투자 67조 원 규모로 확대

-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2.2조원 증액돼 역대 최고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됨. 분야별로는 SOC가 47조 원, 에너지 18.4조 원, 기타 1.6조 원 순.

2022년 공공기관 투자 (67조 원)		
SOC 47조 원	에너지 18.4조 원	기타 1.6조 원

- 공공기관들은 상반기 중 52.6% 이상 집행 추진할 계획으로,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투자이행상황을 점검 및 집행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할 방침.
- 정부는 15.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추진. 우선, 총 11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 사업추진 부담 완화 및 민간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다수시설 결합 개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유지관리를 위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다변화할 계획. 아울러 부대사업 유형 확대, 적격성조사 평가방식 개선 및 인허가 부담 완화에 나설 것.

(e대한경제, 12. 23.(목))

## ▣ 서울 개발정보 한눈에,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개발

-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가결된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공포 및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해당 조례안은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 2. 현재 시가 서비스 중인 ‘일사편리’의 단점 보완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시가 서비스 중인 ‘일사편리’는 지적도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열람하고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음. 제공하는 정보량은 방대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국토부가 운영 중인 ‘세움터’는 건축 및 주택 인·허가 정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등을 제공 중. 이 또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유용할 뿐, 다목적 부동산 정보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구 분	일사편리(서울시 운영)	세움터 (국토부 운영)
기 능	○ 지적도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열람. ○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 건축 및 주택 인·허가 정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제공/
단 점	○ 제공하는 정보량은 방대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	○ 인·허가 절차를 밟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유용할 뿐, 다목적 부동산 정보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장점을 연동시켜 정보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데 초점을 맞춤.</li> <li>● 서울 내 지역별 부동산 개발 속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시 차원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li> <li>●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li> </ul>	

- 새롭게 구축되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서울 내 지역별 부동산 개발 속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시 차원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 또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는 이 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하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 (헤럴드경제, 12. 28.(화))

##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 건설공제조합, 20일 영업점 개편 1단계 실시

-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2021년 12월 20일 영업점 개편 1단계를 실시. 이는 지난 2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공제조합 혁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실시 하는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말을 목표로 2단계 개편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
- 1단계 개편은 구체적으로 광주·순천·목포 지점을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2층)로, 대구·포항·구미 지점을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6층)로 개편하고, 강릉·삼척 지점을 영동지점(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 6층) 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조합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조합원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점 이전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함.  
(MTN 뉴스, 2021. 12. 15.(수))

###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 업무도 이제 '온라인·비대면' 시대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1년 12월 23일 신규 가입 조합원을 위한 '인터넷 출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 조합은 보증, 용자, 공제 등 주요업무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조합 신규 가입 업무까지 범위를 넓힘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오고 있음.
-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인터넷 출자 서비스를 통해 신규 조합원이 지점 방문 없이도 조합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대한전문건설신문, 2021. 12. 24.(금))

■ 전기공사공제조합, 제14대 이사장 선거전 '돌입'

-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의 차기 이사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전기공사공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광식)은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회관에서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4대 이사장 선거 후보등록을 확정하고 기호추첨을 완료.
-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강기철 후보(대일전기 주식회사 대표)가 1번, 박길호 후보(주식회사 이엑스솔라 대표)가 2번, 백남길 후보(합자회사 서전사 대표)가 3번을 받음. 각 후보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음.

성 명 (생년)	주 요 약 력
 <b>강 기 철 (195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감사</li> <li>○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제15대 회장</li> <li>○ 경남도장학회 이사장</li> <li>○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명예본부장</li> </ul>
 <b>박 길 호 (197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미래전략위원회 위원</li> <li>○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상생협력위원</li> </ul>
 <b>백 남 길 (195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이사</li> <li>○ 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장 및 이사</li> <li>○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li> </ul>

-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이사장 후보자 경력 및 공약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전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 바 있음. 이어 각 후보자의 정견발표 영상을 27일 인터넷 영업점 홈페이지 및 총회 시스템에 공개.
- 한편, 제14대 이사장 선거는 내년 2월 23일 조합회관에서 열리는 제40회 정기총회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 (e대한경제, 12. 9.(목))



■ "탄소중립 실현 선도하자", 내년 초 '에너지 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개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내년 초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출범시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한전 등 15개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대표 등과 함께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 이행방안과 함께 각 기관에서 계획 중인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에너지공기업 주요 탄소중립 추진방향(안) >

기관명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	▶ ①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및 안정성 강화, ②에너지 효율향상 촉진, ③전력생산수요 분산화 주도, ④ 지속가능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등
발전5사	▶ ①석탄발전 LNG로 연료전환(~'34 석탄발전 24기 LNG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35 43GW 확충), ③무탄소 신전원 기술개발 및 적용, ④CCUS 및 CO2 감축기술 R&D 등
한국수력원자력	▶ ①안전한 원전 운영, ②재생에너지 사업 확대('50년 태양광 43.1GW, 풍력 2.2GW 목표), ③수력 효율 향상 및 신규 양수 건설, ④수소-에너지 융복합 사업 선도
전력거래소	▶ ①재생E 확대에 따른 新자원(ESS-동기조상기) 확보 체계 신설, ②재생E 입찰제도 및 보조서비스·실시간 시장 도입 추진, ③재생E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감시·제어 기준 마련 등
한국석유공사	▶ ①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석유개발/비축사업 지속 추진, ②친환경 신에너지 확보를 위한 신 에너지 사업 추진 (ex. 부유식 해상풍력, 탄소지중저장(CCS), 수소암모니아 사업 등)
한국가스공사	▶ ①수소 플랫폼 구축(청정수소 도입·생산, 수송용 생산기지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②저탄소 LNG 공급
한국지역난방공사	▶ ①수명만료 열병합발전설비 → 수소 열병합발전로 교체 또는 CCUS 기술 적용, ②첨두부하 보일러 설비 전기보일러로 교체
한국광해광업공단	▶ ①친환경 광산개발 투자 및 기술지원, ②폐광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및 도시재생사업 총괄기획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 ①수소 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②수소 관련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③수소 안전 관리 인력 양성 확대, ④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마련
한국에너지공단	▶ ①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제도 개선·이행, ②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신재생 수용성 강화 및 계통 안정성 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①탄소중립 로드맵 연계 대규모 예타 추진(CCUS, 그린수소 등), ②탄소중립 R&D 개방형 기획 추진 등

- 박기영 차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수소·암모니아의 혼소 및 전소기술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 달라고 당부.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선(先) 계통보강 후(後) 발전설비 구축체계로의 전환 등 전력 계통망의 적기 보강과 함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에너지공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전 등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력망 선제적 구축 등을 통해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적극 선도해 나갈 방침. (전기신문, 12. 16.(목))

# 금 용

##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1. 12. 1. ~ 2021. 12. 30.

구 분	변 동 폭	12. 1 기준가	12. 30 기준가
KOSPI	▲ 77.93	2899.72	2977.65
KOSDAQ	▲ 56.83	977.15	1033.98
S&P500	▲ 265.69	4513.04	4778.73
CD(91일, %)	▲ 0.03	1.26	1.29
국고채(3년,%)	▼ 0.014	1.813	1.799
회사채(3년, AA-, %)	▲ 0.032	2.385	2.417
국고채(10년, %)	▲ 0.066	2.182	2.248
미국고채(10년, %)	▲ 0.108	1.404	1.512

### □ 증시

- [국내]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있었으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긴축 우려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화되었음.
- [미국] 경구용 치료제 사용 긴급승인, 증상 경미 등 낙관적 전망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연말 소비 호조 소식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냄

### □ 금리

- [국내] 한은의 내년 금리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완화적으로 해석되어 단기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였음.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 여전채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며 회사채와의 스프레드가 축소됨.
- [미국] 양호한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으로 상승하다 FOMC 결과가 예상에 부합하고 연준의 강한 물가 통제 의지가 확인되자 상승폭이 축소.

## ■ 美 12월 FOMC : 시장 예상과 부합한 매파적 색채

-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만장일치로 0~0.25%로 동결하였으며, 목표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 22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음. 테이퍼링은 가속화를 결정하여 당초 6월로 예상되었던 테이퍼링 종료시점을 3월로 앞당겼음.
- 성명서 문구에서 경기진단은 팬데믹 타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자리의 견고한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예고하였음.
- 기자회견에서는 경제가 완전고용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점진적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급격한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차단하였음. 다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심화될 위험이 높아져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며 22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수준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였음.
- 연준의 행보는 매파적이었으나, 정책 정상화 대응이 물가 급등보다는 향후 고용 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기조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표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었음. 시장은 내년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 종료 이후 상황을 살펴본 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12. 16.(목))

## ■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완화기조 축소 예고

- 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014년 이래로 7년간 유지해 온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였음.
-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은의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2%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시장에서는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총 2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일보 12. 24. (금))

## ■ 오미크론 확산과 긴축통화정책

-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증가하면서 봉쇄조치 등이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내년 초 경제활동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여 1분기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각 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작년 팬데믹 초기의 통화정책 완화가 아닌 자산 매입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였으며, 美 연준도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공급망 악화사태가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오미크론이 미치는 경제 영향에 대하여 성장둔화 보다는 고물가 장기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플레이션 통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 (국제금융센터 12. 20.(월), 이데일리 12. 20.(월))

## ■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으로 166조 원을 발행하며 단기물 비중은 줄이고 장기물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음. 올해 발행량보다 14조 5천억 원 감소한 규모이며, 재정 조기 집행과 만기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늘어난 국채 발행량을 일부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현시점 기준으로 내년 발행량을 전망한 것이며 여야 대선후보들이 역대급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어 국채 발행물량이 계획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제기됨.
- 작년과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도 낮아 발행환경이 우호적이었으나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게 될 경우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매일경제 12. 24.(금), 12. 26.(일))